

통독 6주년 기념 지버트 박사와의 대담

: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호스트 지버트 / 독일 키일세계경제연구소 소장

정순원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버트

정순원: 80년대 후반 구동독을 포함한 동유럽 경제권의 급작스런 붕괴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버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위 '전환 충격'(transformation shock)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격체계가 성립됨으로써, 주요 투입 요소는 물론 산출에 대한 가격도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 하에서, 기존의 자본 스톡은 거의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환율이라는 또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반면, 구동독은 기존의 화폐가 4 배로 절상되는 엄청난 현상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구동독 산업들에게 추가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상황에서, 구 동서독이 각각의 독립된 화폐를 유지하는 '이원적 화폐체제'(dual currencies)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특히 어려웠던 점은 구동독의 임금을 매우 급격하게 구서독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기업들의 생존력을 파괴하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투자 유치 또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실질 임금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예를 들

1) 본 고는 독일 키일세계경제연구소장인 호스트 지버트 박사(Dr. Horst Siebert)와 본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정순원 박사와의 서면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정순원

어, 폴란드는 1990년 실질 임금에 31% 감소하였으며, 체코도 1991년에 35%의 실질 임금 감소를 경험하였습니다.

정순원: 1990년의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그 당시 다른 대안이 존재했다고 보십니까?

지버트: 1989년 말에 앞으로 몇년에 걸친 유예 기간을 두고 당분간 두 개의 국가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1990년 1월에는 당분간 두 개의 통화를 유지하되, 양자 모두 중앙은행(Bundesbank)이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독일 헌법에 의해 보장된 상태에서, 이러한 대안들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정치적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구서독 헌법을 즉각적으로 구동독까지 확대 적용하는 소위 '빅 뱅'(big bang)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순원: 구 동서독의 경제 통합을 위한 지난 6년간의 노력을 성공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실패라고 보십니까? 화폐, 임금, 재정 이전, 사유화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 가운데 성공적이었던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패한 정책들을 어떻게 바로 잡고 싶습니까?

지버트: 분명히 실패한 정책으로는 임금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임금은 생산성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지금도(1995년 자료) 구 동독의 단위당 노동 비용은 구서독에 비해 30% 정도 높습니다. 이는 곧 구동독 지역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 인상은 생산성 증가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에게 고소

분명히 실패한 정책으로
는 임금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임금은 생산
성보다 더 많이 증가하
였으며, 지금도(1995년
자료) 구동독의 단위당
노동 비용은 구서독에
비해 30% 정도 높습니
다. 사유화 정책에 있어
서는 바우처제도를 적용
하지는 않았습디만,
자본 소유권은 단시일
내에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
본적으로 옳은 것이었습
니다.

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임금보조금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동조합에게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독일 경제 정책의 기본 철학은 구동독 지역에 완전히 새로운 자본 스톡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떻게든 자본 축적을 단시일 내에 이루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임금 보조금보다는 자본 보조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이러한 자본 보조금 정책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봅니다.

사유화 정책에 있어서는 바우처제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디만, 자본 소유권은 단시일 내에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물론 서방의 발달된 경영 기법을 구동독에 유입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구동독인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이 사유화 과정에서 약 3,000억 마르크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구동독인들에게 돌아갈 것은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소유권 구조는 개인 자본 소유자들의 구동독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서 작용했을 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기업,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거 소유권자들은, 자신의 재산이 1945년부터 1949년 사이 구소련 군사 정부에 의해 압수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구동독 산업의 대부분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소유권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존중이 투자 지연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1996년 봄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재인정과 관련된 재판 가운데 겨우 60%만이 해결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무시했다 라면 경제 발전을 어느 정도 촉진시킬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재산권에 대한 존중은 미래의 재산권

현 시점에서 독일 경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과연 경쟁력있는 수출 기반이 마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캐치 업'(catching-up) 과정의 속도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향후 몇년이 지나야 알게 될 것입니다.

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일종의 '투자'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비상 사태에서도 재산권을 존중해줬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앞으로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재산권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순원: 지금 현 상태에서 독일 경제의 중요 문제점으로는 무엇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지버트: 현재 구동독 지역으로의 재정 이전은 독일 GDP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독일 경제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GDP 가운데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증가했습니다. 세금이 상당히 올라갔고, 재정 부채 또한 1989년의 9,000억 마르크에서 현재 2조 마르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독일 경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과연 경쟁력있는 수출 기반이 마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캐치 업'(catching-up) 과정의 속도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향후 몇년이 지나야 알게 될 것입니다.

정순원: 통일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콜 총리가 약속했던 '아름다운 풍경'(blossoming landscapes)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구동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편, 통일 과정에 있어서 구서독인들의 가장 주된 불만은 무엇입니까?

지버트: 1990년 당시 구서독의 30%에 불과하던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NP는 1995년에 구서독 수준의 55%까지 증가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55%라는 숫자가 갖는 다른 의미는 아직도 구동독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정말 길고도 긴 길입니다.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다수의

구동독 정치 권력의 평화적 교체가 가능했던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변화 및 자유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강력한 열망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들의 열망은 너무도 강렬하여 당시 구동독 엘리트로서도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구동독인이 이러한 변화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수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와 격변의 시대에는, 과거 기득권 층을 비롯한 사회의 일부 계층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실업을 포함하여 실업률은 아직도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서독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 이전의 부담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순원: 많은 한국인들은 독일 통일 과정이 정치적 측면에서 너무도 쉽고 빠르게 진행된 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구동독의 정치 엘리트에 의한 군사적 저항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통일된다면 북한 정치 엘리트에 의한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또 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동독의 고위 지배층이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것처럼 평화롭게, 즉 아무런 군사적 저항없이 포기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버트: 정치 권력의 평화적 교체가 가능했던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변화 및 자유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강력한 열망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들의 열망은 너무도 강렬하여 당시 구동독 엘리트로서도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정순원: 한반도 통일의 향후 전망에 대한 지버트 박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반도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독일 통일 과정과는 다른 형태를 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버트: 통일의 경우 구동독 주민의 수는 구서독의 1/4에 불과했던 데 반해, 한반도 통일의 경우는 더 많은 비율의 주민이 남한 성제로 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영토도 넓기 때문에 도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구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정치체제의 변화를 원했고, 또 그 변화의 구체적 형태로서 통일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소망이 구동독 지역에 존재했던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구동독 주민들이 구서독의 TV를 시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도 독일의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일 한국이 독일의 통일 과정을 그대로 모방한다면, 통일의 부담과 전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관점에서 대두되는 한가지 논점은 과연 두 개의 다른 경제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법체계 등 기본적인 것들은 양체제에 즉시 적용하되, 남북한 양측은 통일의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통일 조약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두 개의 통화를 일정한 기간까지 유지함으로써, 북한 지역으로 하여금 스스로 교환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 일반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순원: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인들이 언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의 정책 결정자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지버트: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구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정치체제의 변화를 원했고, 또 그 변화의 구체적 형태로서 통일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소망이 구동독 지역에 존재했던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구동독 주민들이 구서독의 TV를 시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시위 효과’(demonstration effec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TV를 볼 수 있게 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곧 실현될 수 있으리라 보고 봅니다. 북한 주민의 남한 TV 시청을 가능하게 해준 값싼 플러그를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